

예산·민생법안 쌓인 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고심

“필리버스터 취소해야” 강경모드... ‘4+1’ 공조 논의키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뚫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향후 이 같은 의사전행 방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야당과의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해야 하고,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먼저 ‘신의’를 저버린 상황에서, 언제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의 사상초유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민주당도 강경하게 맞받아치면서, 여야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통상적으로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도 이날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2~3일 내에 필리버스터 철회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지난 4월 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공조를 함께 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이 함께 하는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경우에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만큼, 예산안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한 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나 주요 민생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들을 바로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지연된 안건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제도 없지는 않다. ‘4+1’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거품을 둘러싼 각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김윤호 기자

“신중했어야”

유승민·오신환 중징계 결정에 바른미래 당권파도 걱정 “윤리위, 조직 일원...당 어려움·최고위 의중 고려했어야”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당권파 주축 당 지도부 내에서도 윤리위 결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손 대표는 윤리위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중징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윤리위는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인만큼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윤리위가 독립기구이면서도 당 조직 중 일원인 만큼 지도부 등 당내 의중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 원내대표직을 수행 못하게된 거 자체가 유감”이라면서도 “윤리위의 독립성은 보장돼 있고 당은 간섭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손 대표는 “윤리위에서 15명 징계절차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히 결정해달라했는데 이런 결과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신당을 창당하고 모임 주도하는 의원들은 떼뺏히게 당 밖으로 나가서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관영 최고위원은 “지난 주 최고위원-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모았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비록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고위의 의결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당이 분열돼 있는데 더 큰 분열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번 결정이 일부 의원들의 탈당 후에 당 재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다시 한 번 변혁(비당권파 중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매우 심각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어제 윤리위 결정은 앞으로 남아 있을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에게조차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비록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고 했다.

채 의장은 “앞으로 윤리위의 결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집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라며 “보 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현명하게 수습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재훈 사무총장 또한 “윤리위가 당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의 어려운 상황과 입장을 헤아려서 판단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표현도 조심스럽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중지를 모아서 당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뉴스1

민주 39.0% · 한국 32.9%...양당 지지세 결집

리얼미터, 정의 6.5% 바른미래 4.7% 공화 1.8% 평화 1.6%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지지세가 결집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9년 11월 4주차 추간집계 결과, 민주당은 39.0%, 한국당은 32.9%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주 대비 각각 1.7%포인트(p), 2.6%p 상승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정의당

(6.5%), 바른미래당(4.7%), 유리공화당(1.8%), 민주평화당(1.6%)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12.0%였다.

거대양당의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무당층을 비롯한 소수야당의 지지율은 대부분 하락했다.

민주당은 1주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주일 전의 39% 선을 회복했다. 중도층과 진보층, 20대와 50대, 40대, 대구·경북(TK)과 경기·인천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과 충청권에선 하락했다.

한국당은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마감하고 30%대 초중반으로 반등했다. 보수층과 진보층, 60대 이상, 40대, 30대, 충청, 부산·울산·경남, TK, 서울, 호남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선 지지율이 올랐지만 20대에선 하락했다.

오신환 “손 대표, 추태로 정치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 은퇴”

“직선으로 선출한 원내대표 직무 멋대로 정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과 당원을 위해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명하는 것뿐”이라며 “하지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압도적 다수는 오신환이 아니라 손 대표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1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 내린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직선으로 선출한 원내대표 직무를 자기들 멋대로 정지시키겠다는 것인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손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혁신 제 3막, 30%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의 파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성을 회복해야 바란다”며 “선거법·공수처법이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